

한국 보수 담론의 ‘민족’ 수사의 정치: 『반일 종족주의』(2019)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2020)의 ‘민족’*

이지윤 | 서강대 글로컬사회문화연구소

| 국문요약 |

반일 종족주의(2019)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2020)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이유로 민족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판자들은 주로 이 책들의 저자들의 친일적인 정체성과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고, 과거 뉴라이트 세력과 동일시했다. 이들의 비판은 한국 보수 세력의 민족주의적 수사는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인해 두 책이 펼치는 논변을 구성하는 언어, 수사, 논리는 분석되지 않았다. 반면 이 논문은 민족을 부정하는 텍스트에 있는 주변적인 민족 수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의 민족 수사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민족 수사의 차이점을 밝힌다. 그리고 민족 수사의 정치를 발화자의 알리바이와 담론 수용자의 오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주제어 |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민족 수사의 정치, 한국 보수주의 담론, 뉴라이트, 극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5772). 논문 초고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I. 들어가며

2019년 7월 10일에 강제징용, 독도,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의 반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되었다. 『반일 종족주의』는 신일철주금에게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했고,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위안소는 “군에 의해 편성된 공창제로서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이었고, “직업으로서 위안부는 위안소라는 장소에 영위된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다고 했다(이영훈 외 2019, 17, 169, 316, 325).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는 2019년 8월 2주차부터 몇 주에 걸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한국일보 19/08/26), 2020년 5월에 후속작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하 『투쟁』)이 출간되기까지 약 11만 부가 팔렸다(이영훈 외 2020, 5). 2019년 11월 14일 일본 문예춘추 출판사가 번역 출간한 일본어판은 출간되자마자 온라인 서점 ‘아마존 재팬’에서 종합순위 1위에 올랐고, 석 달 만에 40만 부 이상 팔렸다(서울신문 20/01/28).

보수 정치인과 ‘논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물랐던 부분을 일깨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9/08/14), 같은 당의 정종섭 의원은 “100만 권이 팔려서 전 국민이 정말 눈을 뜨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JTBC 뉴스 19/08/19). 또 팬앤마이크의 정규재는 “이 책이 백만 부 정도 팔리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이 열기의 연장선에서 이른바 ‘애국 보수’들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내가 바로 친일파’”라고 외치고, 아베 총리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립니다”라고도 했다(강성현 2020, 47-8). 반대로 이런 사태를 두고 한 진보 유튜버는 한국 보수를 “험한일뿔”으로 풍자했다(YTN 20/01/17). 한국 보수의 안팎에서 ‘친일’이 한국 보수의 정체성으로 운위되고 있는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루면서 그 저자들의 외세의존적인 인식과 정체성 및 정치적 동기를 거론하는 방식을 취했다.¹⁾ 예를 들어, 김민철은 “한국의 뉴라이트”가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정”한 일본 극우 지식인들의 역사부정론을 “한 치의 발전도 없는 진부한 레퍼토리”로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민철 2019, 2). 또 박수현은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들이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을 주도했던 “뉴라이트”로, 이들은 일본 극우세력처럼 “대중들, 그 중에서도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보수층”에 기대어 “보수층을 결집하고, 궁극적으로 극우 보수세력”의 “집권”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수현 2019, 56). 박한용에 따르면, 『반일 종족주의』는 이미 민족을 부정해온 뉴라이트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샤머니즘과 물질주의와 연계된 주술적 종족주의라고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뿐이었다(박한용 2020, 49-51). 비판자들은 공히 ‘반일 종족주의’를 학술적인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때문인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 어떤 논리, 언어, 수사로 민족을 부정했는지를 독자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기존의 주된 비판 방식은, 친일과 권위주의적 지배의 과거를 가진 한국의 보수 세력이 운위하는 민족주의적 수사란 그들의 과거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활용되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비판자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1) 『반일 종족주의』의 여러 세부 논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종의 서적, 학술회의, 언론 기사가 비판적으로 다루었다(민족문제연구소·일본군·위안부 연구회 2019; 황태연 외 2019; 근현대사기념관 2019; 정혜경 외 2019; 김종성 2020; 강성현 2020; 호사가 유지 2020; 이철우 외 2020).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2020)을 발간했으며, 전강수(2020)는 『투쟁』까지 포함한 비판서를 출간했다. 비판들은 주로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한일협정 등에 관한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지를 따졌다.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 민족주의를 ‘거짓말’의 문화와 결부시킨 것처럼, 비판은 『반일 종족주의』를 ‘탈진실’, ‘역사부정’, ‘거짓’으로 규정했다.

관점에 따르면 “극우 반공 정권이 구사한 민족주의적 수사를 민족주의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 범주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명섭 2005, 33). 오히려 필요한 것은 보수의 수사가 거짓임을 밝혀내고 그 담론 발화자의 반민족적 의도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식민의 과거는 물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과거사 청산도 현재진행형이고 여러 유형의 역사부정론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이 지닌 실천적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발화된 언표와 그 언표가 지칭하는 사실 관계를 대조하고, 그 간극에서 발화자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은 담론 분석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진실 대 거짓, 민족과 반민족의 구도를 암묵적으로 전제할 때, 한국의 보수가 어떤 언어와 수사를 통해 논변을 구사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분석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 비판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족과 반민족의 이분법적 구도가 보수의 수사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²⁾ 게다가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만큼이나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이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졌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수주의를 담론과 수사의 측면에서 분석한 허시먼의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득세할 때, “보수의 정신이나 성격을 연구하는 …… 심층적인 공격”은 오히려 “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2) 예컨대 황태연은 “일제종족주의를 적대하는 ‘저항적 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의 지선한 정치도덕이요 헌법이념이다. …… 우리의 이 지선한 민족주의는 어떤 식으로든 폄훼되어서도 아니 된다. …… 우리의 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폄훼하는 것이든, 우리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가해적 일제민족주의를 등치시키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서 ‘중립 놀음’을 하는 것이든, 현학적으로 ‘탈민족주의’를 운위하는 언동이든 모두다 우리 헌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 반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급한 대로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따져 보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 법으로도 부왜노들을 체포·수사·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황태연 외 2019, 48, 49, 101).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황태연 등을 반일 종족주의자의 대표격으로 지목하면서 “그들의 망동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에 숨긴 이 시대의 추한 면모를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맙기도 합니다”라고 응수했다(이영훈 외 2020, 168).

적에 대한 불필요한 매혹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담론·주장·수사법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현상”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담론은 참여자의 욕망·성격·신념과는 거의 무관한 논쟁의 규범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썼다(허시먼 2011, 16-17). 허시먼의 고전적인 연구는 보수주의자의 주장에 담긴 언어, 수사, 논리를 세심하게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비판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명백히 한국의 민족을 비하하고 부정하는 텍스트에 섞여 있는 주변적인 ‘민족’ 수사를 추적한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의 민족 부정이 『투쟁』에서는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민족’ 수사를 통해 펼쳐지는 정치를 발화자의 알리바이와 담론수용자의 ‘오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의 ‘민족’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한 『반일 종족주의』에서 긍정적인 용례로 사용된 민족은 나오지 않는다. 『반일 종족주의』의 색인에도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나오지 않으며, 단체명과 고유명사를 제외하면 민족차별(5회)과 민족의식(1회)이 나온다. 민족차별은 모두 ‘반일 종족주의에 경도된’ 강제노동의 민족차별론을 지칭하고 있으며, 민족의식 역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강조하는 학도병 탈영자의 저항적 민족정신을 “적나라한 생존본능”으로 형용하며 부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이영훈 외 2019, 111).³⁾

36회 이상 등장하는⁴⁾ ‘반일 종족주의’가 ‘민족’과 같이 나오는 대목을 보면,

3) 사실 『반일 종족주의』에서 ‘민족의식’은 색인과 달리 적어도 한 군데에 더 나온다. “우리 모두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민족의식”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하에 형성된 것이라는 대목이다(이영훈 외 2019, 246). 『반일 종족주의』만을 보면 여기서의 ‘민족의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투쟁』과 같이 읽을 경우, 이때 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민족의식’이 줄곧 비판되는 종족주의와 대비되는 우파적인 ‘한국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아래에서 논의한다.

4) 『반일 종족주의』의 색인에는 민족과 관련해서 반일 종족주의를 서술하는 21쪽이 빠져

『반일 종족주의』의 일관된 민족 부정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이영훈 외 2019, 20-21, 183, 249-251, 388-389).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이분법적인 대비를 통해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를 비하하고 부정하며, 그것을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삼고 있다.⁵⁾

〈표 1〉 『반일 종족주의』에서 민족의 의미

| 서구의 민족주의 ⁶⁾ |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 |
|---------------------------|--|
| 문명 | 야만 |
| 왕과 귀족의 횡포에 저항하는 자유시민의 공동체 | 유교의 사생관과 전통적인 샤머니즘에 기초한 귀족적인 신분성 |
|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 | 물아와 물개성의 집단주의 |
| 열린 세계관, 과학성 | 이웃을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닫힌 세계관 미신성, 샤머니즘 공유하는 진리나 가치가 없고, 객관적 논변이 허용되지 않는 물질주의 사회 거짓말이 장려됨 |
| 자유민주체제, 자유시장경제, 선진적 교양 | 독재주의, 전체주의, 김일성 민족 ⁷⁾ |

있다.

- 5) 남기정은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반일 종족주의’의 설명과 주요 용례들을 검토한 후, “이 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끝끝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종족주의’란 다만 “저널리즘의 언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남기정 2020, 93, 96).
- 6) 『반일 종족주의』에는 남기정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민족주의’론 분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구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도 나오지 않는다(남기정 2020, 96). 따라서 이 도표는 관련 구절들에서 도표에 나온 이분법적인 대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맥락상 추정할 수 있음을 나타낼 따름이다. 한편 서구 민족주의와 대비하여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방식의 근거에는 저자들의 서구중심주의적 편향성이 자리잡고 있다.
- 7) 전재호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민족과 민족주의가 반일·친북과 ‘자의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이영훈이 “반일을 주장하는 세력, 특히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을 ‘친북’으로 낙인찍기 위해 한국 민족의 귀족적 신분성에서 시작하여 독재주의와 전체주의, 김일성 민족, 그리고 남한 민족주의로 연결되는 ‘반일=친북’이라는 ‘연쇄 논리’를

즉, 『반일 종족주의』에서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는 표현의 측면에서도 거의 일관되게 전면 부정되었고, 그 자리를 종족과 종족주의가 대신한다.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에 쏟아진 비판들을 반박하기 위해 약 10개월 후에 출간된 『투쟁』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투쟁』에도 ‘민족’의 색인어는 없지만, 민족주의(6회)⁸⁾가 색인어로 포함되었고, 단체명을 제외하고 민족자결(1회)과 민족해방(1회)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투쟁』에서의 ‘민족’의 용례가 『반일 종족주의』에서의 전면 부정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에서 민족이 ‘반일 종족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비하·부정되는 맥락에서 등장했다면, ‘반일 종족주의’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용어인 것처럼 전제하는⁹⁾ 『투쟁』에서 민족의 용례는 단순히 비하·부정되지 않는다. 민족은 오히려 이념적 구분에 포섭된 민족의 수사로, 곧 긍정되어야 할 우파 민족주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서사 속에서 출현한다.

『투쟁』의 ‘민족’이 갖는 의미 체계는 공동저자인 정안기의 이광수와 같은 “친일 내셔널리스트” 및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난다. 좀 길지만 맥락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용하겠다.

과연 민족의식이 황민화 정책으로 그렇게 쉽게 말살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은 민족이란 20세기 초엽의 조선인이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발견한 상상의 공동체였습니다. 실체성을 결여한 상상의 집단 의식이기 때문에 민족은 오히려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단군을 시조로 하는 확대가족으로서 운명공동체라는 역사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의 숨결은 영원하다”는

‘발명’했다”고 비판한다(전재호 2020, 56).

8) 『투쟁』의 색인어에는 민족주의가 7회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색인에 표기된 5쪽에는 나오지 않는다.

9) 『투쟁』에서 99회에 걸쳐 등장하는 ‘반일 종족주의’는 대부분 『반일 종족주의』나 반일 종족주의자를 지칭할 뿐이다.

근본주의적 감성체계이기도 합니다. 조선인은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보급한 대표적인 지성으로서 한국의 근대문학을 개척한 이광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무지, 불결, 무질서, 무기력에 절망했습니다. …… 그는 일본처럼 협동하고 청결하고 용감한 문명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민족 재생의 길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런 이광수를 두고 조관자는 “친일 내셔널리스트”라 명명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가 그러한 생성 경로를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북한의 수령체제를 성립시킨 물개인의 공산적 민족주의와는 구분되는 역사적 경로입니다.¹⁰⁾ … … 그 시대 조선의 청년들은 이광수의 작품을 읽고 근대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식민지 민중으로서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조선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민족의식을 일구었습니다(이영훈 외 2020, 160-61).¹¹⁾

육군특별지원병제에 협력했던 조선인 정치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어리석은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민족을 팔아넘긴 매국노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정치적 선택의 주관알을 튕긴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이영훈 외 2020, 166).

-
- 10)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김일성 민족이 종족주의가 순수형태로 완성된 것이라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었다. “남한의 민족주의가 이 같은 북한의 동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민족인지라 남과 북은 장기지속의 심성에서 서로 통하는 모양입니다”(이영훈 외 2019, 250).
- 11) 관련된 다른 민족주의의 용례도 유사하다.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는 이광수에 대해 “그의 애국과 민족주의엔 티끌만큼의 위선도 없었다”고 말하는 회고담을 소개하고 있다 (이영훈 외 2020, 175).

이 용례에서 민족이 북한의 민족주의와 대비되고 있다는 점은 『반일 종족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여기서 민족은 완전히 다른 구도에 배치되었다. 먼저 서구 민족주의와 대비되어 전면 부정되었던 한국의 민족주의—즉, 종족주의—는, 조선인을 일본인처럼 문명화하고자 했던 “친일 내셔널리스트”로부터 생성된 한국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수령체제를 성립시킨 몰개인의 공산적 민족주의”의 대비로 대치되었다. 『투쟁』은 별다른 논의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 지속적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의 민족주의와 집단주의적인 한국의 종족주의의 대비라는 『반일 종족주의』의 구도가 『투쟁』에서도 여전히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 결과 종족주의로 전면 부정되었던 한국의 민족주의는 기실 북한과 연루된 ‘공산적 민족주의’로 국한되고, 다른 한편 친일 내셔널리즘에 연원을 둔 한국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민족주의와 같은 성격의 것인 양 읽힐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도의 변화는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논변의 수정을 동반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한국 민족주의의 근원은 야만, 집단주의, 물질주의, 거짓말 등으로 대변되는 장기지속의 저열한 정신문화가 아니라, “단군을 시조로 하는 확대가족으로서 운명공동체라는 역사의식”,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의 숨결은 영원하다”는 근본주의적 감성체계,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논변은 『반일 종족주의』와 달리 민족주의적인 수사를 거리낌 없이 가져오면서 그 의미를 바꾸고 있다. 한편으로 수사적인 차원에서 민족은 단군이라는 혈통적 기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영속성을 부여받고, 국가와 분리되더라도 존재의 근거가 소멸하지 않으며, 그 역사와 전통문화는 저열할 정신문화로 비하될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을 이룬다. 이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수사적 표현은 이광수의 친일 내셔널리즘을 경유해서 이해되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전도되고 모호해진다. 즉, ‘한국 민족주의’는 단군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을지언정 가까운 과거

었던 조선에 대해서는 “무지, 불결, 무질서,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일본에게서 “협동하고 청결하고 용감한 문명인”이라는 민족 재생의 지표를 발견한다. 그것은 이광수와 같은 선각자에 의해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일본인과 같은 문명인의 정체성을 “민족적 정체성”, “조선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민족의식”으로 삼는다. 이로써 ‘저항’의 의미가 삭제된 민족주의적 수사 아래 일본이 민족의식의 원천이자 지향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와 타협하는 관점에서 ‘발견’되는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논변은 이런 ‘한국 민족주의’를 ‘누가’ 발견했는가를 강조한다. 『반일 종족주의』도 민족에 대한 근대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족이 “20세기에 들어 한국인 모두가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의식”이라거나 “20세기에 들어 한국인들이 발견”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영훈 외 2019, 246, 249). 여기서 신채호가 대표적인 민족의 발견자로 거론되었지만, 민족과 민족주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었기 때문에 발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민족의 ‘발견’ 자체가 역사적인 장기지속의 정신문화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신채호의 민족 발견은 미개한 집단주의적·귀족적 신분성을 재연하고 악화시킨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종족주의와 다른 ‘한국 민족주의’의 “생성 경로”를 부각시킬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한국 민족주의’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장기지속의 정신문화를 극복한 선각자적 주체에 의해 일깨워지고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자’라는 기표는 『반일 종족주의』와는 정반대로 상찬의 어휘가 되며, 종래 ‘반민족’으로 지탄받던 이들의 지위를 역전시킨다. 이 연장선에서 일제하의 전쟁협력은 비난받아야 할 반민족적 친일 행위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적 이득을 따진 민족적 행위가 된다.¹²⁾

12) 『투쟁』의 색인에 나온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은 모두 이 맥락에서 쓰였다. ‘민족자결’은 간디가 영국에 대한 전쟁협력을 주장하면서 “민족자결의 전쟁”으로 설파했다는 대목에 나온다(이영훈 외 2020, 165). ‘민족해방’의 용례 역시 이채롭다. 정안기는 윤치호, 최린, 이광수 등의 전쟁협력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공산당 최고 이론가였던 이

대표저자인 이영훈의 민족 어휘 사용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두 가지 대목을 검토해보자. 이영훈은 『투쟁』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방역정책이 중국과 한국을 ‘운명공동체’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족주의적 의식 탓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중국을 두고 우리와 ‘운명공동체’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을 두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운명공동체 의식”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 그가 고집하는 이념의 정치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입각해 있는 공화(共和)의 틀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 과연 중국은 우리와 운명공동체인가요?(이영훈 외 2020, 14-5).

이 대목에서 이영훈은 문재인식의 이념적 ‘운명공동체 의식’에 대한 반박을 자기가 정의한 ‘민족’에 근거 짓고 있다. 그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전면 부정되었던 민족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운명공동체 의식”으로 슬며시 되살렸다. 그리고 그 민족의식이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선일보 이선민 기자에 대한 이영훈의 언급에서는, 이선민 기자를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우파 민족주의’가 긍정되고 있다. 이선민은 한국의 근대는 외부의 힘에 의한 ‘이식’이 아니라 ‘주체적 수용’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제가 이식한 제도라도 근대국가에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활용”한 “우파 민족주의자”의 “안목”을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이영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강국”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을 위한 민족해방군 창설”을 위해서도 조선인의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가져온다(이영훈 외 2020, 164). 이런 서술은 ‘반제국주의 투쟁’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광수 등에게도 ‘반제국주의 투쟁’의 함의를 슬쩍 투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인용된 이선민 기자의 언급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이선민 기자]가 말하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안목’이나 ‘서구적 근대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주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식’된 근대의 민법 체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그가 근대의 ‘이식’과 ‘주체적 수용’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나라에서 그러한 구분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적인 그의 시각이 그러한 차이를 애써 만들고 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이영훈 외 2020, 341).

이 구절에서 ‘민족주의’의 쓰임새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일제가 이식한 제도라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했던 ‘우파 민족주의’와 그런 안목과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파 민족주의’는 이선민의 용어를 인용한 것이지만 이선민의 의도와 달리 친일 내셔널리즘으로부터 생성된 ‘한국 민족주의’를 함의하며, 이선민의 ‘우파 민족주의’는 반일 종족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다.¹³⁾ 다만 우파 민족주의를 강조한 이선민의 시각은 종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순화되어 비판되고 있다.

요컨대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은, 설령 기존 비판자들의 시각처럼 저자들의 의도는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족’의 수사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일 종족주의의 개념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이런 수사적 차원의 수정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애초에 ‘반일 종족주의’가 학술적 정의 없이 민족에 대한 부정으로 그 용어의 내포를 구성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13) 『투쟁』의 각 절의 첫 부분은 “반일 종족주의자 주장하길”로 시작하는,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의 요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성에 따르면, 조선일보 이선민 기자는 반일 종족주의자에 해당한다(이영훈 외 2020, 330).

『투쟁』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 ‘민족’, 그 수사의 정치 : 립서비스, 알리바이, 오인

민족의 수사와 관련된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판자들의 관점과 달리, 2005년 무렵 친일 청산이 정치적 화두로 부상했을 때 보수 담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의 수사를 펼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의 이슈로 부각되었고, 보수진영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친일 청산 반대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2005년은 보수지지층을 포함한 대중의 반일 정서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때이기도 했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이른바 ‘한승조 사태’이다. 2005년 3월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산케이신문』의 월간지 『세이론(正論)』에 실은 기고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축복”이고 “일본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보기에 “친일행위”를 “꾸짖거나 규탄”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한승조는 친일 청산 주장을 “현실 부정과 증오, 원한”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나 좌경사상” 탓으로, 또 “비이성적이고 배타적인 국민의 민족주의”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위안부’에 대해서도 “전쟁 중에 군인들이 여성을 성적인 위안물로서 이용하는 것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는데, “굴욕을 당했다는 노파를 내세워 과장된 사실을 내세워 몇 번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냐며 질타했다(오마이뉴스 05/03/04).¹⁴⁾

2005년의 한승조는 2019년의 이영훈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반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슬렀다. 한승조가 한국정치학을 전공한 원로 교수로서, 1980-84

14) 『오마이뉴스』는 한승조의 『세이론(正論)』 기고문의 전문을 번역해서 게재했다. 인용은 이 번역문에 따른 것이다.

년까지 한국국민윤리학회의 회장이었고, 보수의 쇄신을 주창한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시민연대의 공동대표라는 점이 더욱 거센 비판을 불렀다.¹⁵⁾

하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대목은 당시 보수 세력의 반응이었다. 조갑제와 지만원이 ‘친일보다 더 나쁜 건 친북’이라거나 ‘친일을 배격하는 것은 주사파’라며 한승조를 옹호했지만, 거의 그들뿐이었다(조갑제 2005; 프레시안 05/03/10). 한승조가 대표로 있던 자유시민연대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무리 자유민주국가라지만, 나라와 민족을 억압한 일제 식민지를 미화하는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승조를 포함한 공동대표 전원사퇴 및 한승조의 제명을 요구했다(중앙일보 05/03/06). 또 『동아일보』는 ““한승조 史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게재했으며(동아일보 05/03/07), 해군첩보부대 출신자들은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에서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한승조와 지만원 같은 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오마이뉴스 05/04/01). 이 사태를 분석한 하종문은 한국의 보수가 “반일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공개리에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한국 내부의 역사갈등은 반일민족주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종문 2007, 189, 192).

이런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청산 반대론은 역사적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한 친일 청산에 반대할 의사를 갖지 않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형태로 세심하게 조정되어야 했다. 이 점에서 당시 보수 담론이 수사적인 차원에서 ‘민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족주의적 감성을 환기시키는 표현들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박효종은 친일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범위는 “진성의 사악한 반민족 친일인사”에 국한되어야 하고, 친일파로 비난 받는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과

15) 홍윤기(2005)는 당시의 ‘진보 진영’의 비판을 집약하고 있다. 그는 한승조의 글이 기존의 “단순 친일옹호론”이 아닌 ‘반일이 부당하다’는 주장까지 담은 “친일지상주의”이며, 한승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그가 “단순한 일제 잔재”가 아닌 “자생적인 친일”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끈기로 민족의 낯을 붙여넣은 헌신적인 애족주의자”라고 했다. 그리고 “‘친일’이냐 아니냐의 사실규명”을 넘어서 “민족주의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효종 2005a, 51, 53; 2005b, 87). 보수 담론은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이며 보수 세력의 뿌리인 인사들을 ‘진정한’ 민족주의자들로 재규정했다. 이들을 공격하는 청산이란 반공을 중심으로 한 ‘애국’의 기준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친일청산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수진영은 민족 중심의 친일 대 반일의 구도를 반공의 이념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한 애국 대 매국의 구도로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한편으로 민족을 반공의 하위 범주로 포섭하려고 했고, 다른 한편으로 민족의 수사를 청산 반대의 의도를 가리는 알리바이로 활용했다.¹⁶⁾ 그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친일 청산 반대를 주장했다.¹⁷⁾ 이를 통해 청산론과 청산반대론의 대립을, 청산론과 또 다른 청산론의 경합으로 바꾸고자 했다. 민족주의적 청산론자들은 표면적인 담론과 다른 보수 진영의 의도를 꼬집어 반민족적인 청산반대론이라 비판했지만, 보수지지층은 자신들의 반일 정서, 민족적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좌파를 비판하는 담론에 만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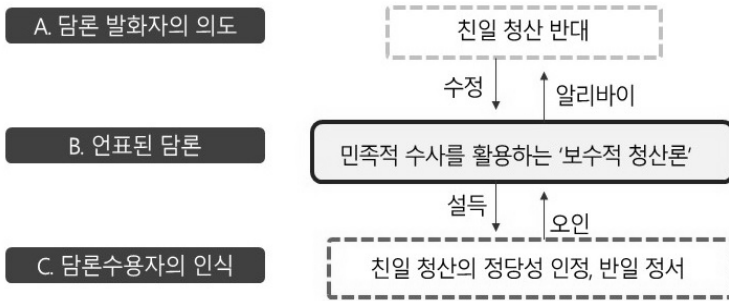
여기서 2005년 무렵 친일 청산을 둘러싼 보수 담론의 민족 수사가 지닌 구조와 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보수담론의 발화자는 담론수용자인 대중이 지닌 민족에 관한 관념이 진보진영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간주하고, 그런 관념 및 그에 기반한 의제에 반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목적은 발화자의 의도와 상충하는 민족 관념을 지닌 대중에게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보수 담론에는 발화자의 의도와 상충할 수 있는,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민족의 수사가 차용되고, 때로 그런 민족 수사의 전유는 매우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담론은 발화자와의 의도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담론수용자의 관념

16) 친일청산에 관한 담론을 민족주의적 청산론, 보수적 청산론, 비판적 청산론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로는 이지운(2018) 참고.

17) 윤해동은 이런 보수의 민족은 ‘국민의 대체 표상’일 따름이라고 지적한다(윤해동 2012, 251).

과도 완전히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양자에 환원되지 않는 담론은 발화자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곧 반민족적 담론이라는 반박에 대항할 알리바이—을 제공하고, 담론수용자에게는 확대된 해석 혹은 발화자의 의도에 대한 ‘오인’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보수 민족 담론의 구조



민족주의자의 시각에서 담론(B)에 포함된 민족의 수사는 발화자의 의도를 가리는 립서비스에 불과하지만, 보수 담론발화자의 의도와 담론수용자의 인식이 동떨어진 것일수록, 립서비스로 가미된 민족 수사는 담론의 유포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친일청산과 관련해서 언표된 담론(B)에는 친일 청산의 반대와 다름없는 주장과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 수사가 공존했다. 그 담론은 청산론자들이 주장하는 친일 청산 방식이 ‘친북’과 같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친일파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청산의 당위성은 인정하되, 과거에 집착하는 ‘반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극일’이 청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청산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건국 세력을 민족주의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담론은 스스로를 청산반대론이 아니라 진정한 친일청산론이라고 자처했다. 담론 발화자(A)는 친일청산론의 형태

로 청산의 실질적인 무효화 혹은 청산 반대를 주장한 셈이고, 담론 수용자(C)는 담론(B)를 또 다른 청산론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이런 담론 구조는, 지배 계급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고수하지만, 겉으로는 “자신의 사상들에 보편성의 형식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표방한다는 마르크스의 언명을 상기시킨다(마르크스·엔겔스 2015, 95). 이 고전적인 언명은 피지배 계급의 동의를 얻고 헤게모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담론이 스스로의 목적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특유한 형식을 취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르디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좀 더 명료하게 언급한다.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그것이 말하는 바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식 아래서만 말한다.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의 기초인, 집단적 오인의 제도화된 원환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수행하는 이러한 부인이 그것이 부인하는 내용을 재오인할 수 있는 해석자들 집단을 만날 때 비로소 성립한다. …… 재오인을 요청하는 오인으로서 모든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품고 있는 상징폭력은 수용자들이 그 담론을 그 담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 취급하도록 만드는 데 비례해서 발휘된다. 이데올로기적 생산이 그것을 객관적 진실로 돌려놓으려는 임의의 독자를 자신의 오류 속에 잡아둘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성공적이다(부르디외 2020, 371-72).

즉,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헤게모니적 효과는 지배의 의도를 숨긴 담론의 형식을 통해, 그리고 의도가 숨겨진 담론에 대한 피지배자의 ‘오인’에 의해 발휘된다. 피지배자가 자신의 ‘오인’을 ‘이해’로 여길수록, 이데올로기는 효과를 거둔다. 『반일 종족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특히 ‘친일’을 둘러싼 보수의 민족 담론도 이와 마찬가지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 부정의 형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반일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민족’을 전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은, 민족에 관한 기존의 보수 담론과 비교했을 때, 일정한 연속성과 함께 의미심장한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공과 국가가 친일이나 민족을 규정하는 상위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립서비스처럼 제시한 민족의 수사를 통해 알리바이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담론 수용자의 오인을 유도하려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반일 종족주의』는 이승만TV의 ‘반일 종족주의 타파 시리즈’ 강의(18/12/11 - 19/3/15, 총 30회 강의)를 정리해서 텍스트화한 것이다. 이영훈은 그 첫째 강의(18/12/11)에서 『반일 종족주의』와 유사하게 한국의 민족주의를 부정한다. “민족주의와 공화주의를 고양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서구 민족주의와 달리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데 몰두했고, 이는 “반일 종족주의와 친중 사대주의”로 짜인 “종족주의의 특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족주의 개념에 대해 수강자들은 모두 수궁했을까? 마지막 강의(이영훈 19/03/15)에서 이영훈은 그간 수강자들의 질문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그에 대해 답변한다.

민족주의라는 것에는 좋은 뜻도 있는데 그 민족주의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용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종족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나 개념이 필요할까 하는 그러한 고마운 지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 동일한 말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게 되면 그 말 자체가 갖는 어떤 타성이나 진부성에 의해서 새롭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서구에서 근대 문명의 산물로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종족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응답에서 주목할 점은, 적어도 수강자들 일부는 한국 민족주의 자체가 아니라 ‘악용된 민족주의’만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종족주의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영훈 역시 질문의 취지를 반박하지 않은 채, 종족주의 개념이 새로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택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하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의 텍스트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전면적으로 부정되었으나 강의에서는 그것이 의도적인 수사적 전략이라고 설명된 것이다.¹⁸⁾

또 한 사례를 ‘수탈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낙년과 전강수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자가 부딪친 지점은 폭력적인 수탈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전강수 역시 역사적인 사실로서 노골적인 약탈설에 대해서는 김낙년과 같이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양자의 차이는 폭력적인 수탈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억압은 없었다는 것인지, 폭력적 수탈은 없었더라도 제도와 정책을 통한 수탈은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강수는 수탈의 개념을 협소하게 잡은 김낙년의 주장이 “제국주의 통치의 합리성을 과도하게 부각”한 반면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과 일본 제국주의의 제도적 폭력성”을 “누락”한 것이라 비판했다(전강수 19/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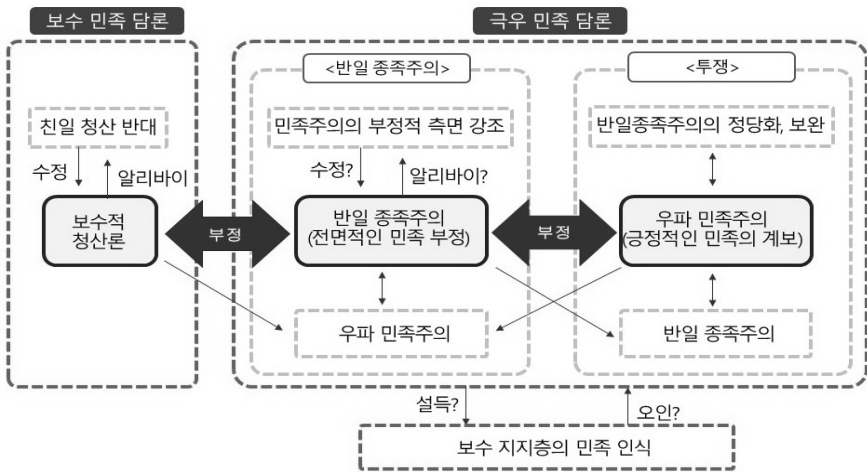
이 논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투쟁』에서 김낙년이 자신은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반박하는 대목이다(이영훈 외 2020, 351-52). 이 대목은 『반일 종족주의』와 거의 유사하지만 상이한 뉘앙스로 조정되었다. 『반일 종족주의』의 해당 구절은 일본의 주권 강탈을 지적한 이후 경제 영역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차별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강조점

18) 이외에도 이영훈은 같은 강의에서 자신은 “일제의 지배가 진선진미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조선을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한 …… 무서운 …… 지배, 총체적인 지배, 그 영혼에서까지 침투하는 …… 지배”였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된 이후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일제의 조선 지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수탈과 차별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벌어지는가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영훈 2019/08/16).

은 당시 조선 경제가 “기본적으로 자유 거래의 시장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어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이영훈 외 2019, 65). 주권 강탈과 식민지 지배 방식은 구분되고, 일제가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전자이지 후자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투쟁』에서 김낙년은 주권 강탈과 식민지 지배 방식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이라는 말로, 자신의 주장은 “일제가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는지”를 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은 보편성의 형식으로 사회의 공동 이익을 표방하여 자신의 특수한 이익과 의도를 부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오인’과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수 담론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이탈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먼저 이 담론의 구조를 도식화해보자.

〈그림 2〉 극우 민족 담론의 구조



이 도식은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하나의 기표 아래 묶여 담론 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어떤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의도는, 기존의 보수 민족 담론과 달리 한국 민족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담론의 형태로 나타났다.¹⁹⁾ 자신들의 의도를 부인하거나 은폐하지 않은 채, 마치 보수 지지층의 반일적 민족주의 정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담론을 펼친 것이다. 이는 반일의 선을 넘지 않았던 기존의 보수 민족 담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수사를 펼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담론의 확장적인 유포 혹은 설득, 사회 구성원들의 오인은 물론 반민족적 담론이란 비판을 우회할 알리바이까지 모두 스스로 차단해버린 셈이다.

그런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반일 종족주의를 정당화하고 보완하는 것을 집필의 의도라고 밝힌 『투쟁』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표제어 아래 한국 민족주의의 전면적인 부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우파 민족주의가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스스로 밝힌 의도와 상충한다. 그럼에도 반일 종족주의라는 표제어와 담론의 외양 아래에 우파 민족주의에 대한 주장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내의 균열과 내적인 모순을 야기한다. 이런 『투쟁』의 균열은, 특히 저자들이 그 균열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반일 종족주의』의 전면적인 한국 민족주의의 부정이 『투쟁』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상상’

19) 이 글은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의 ‘의도’를 도식에서 보듯이 한국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강조와 반일 종족주의의 정당화 및 보완으로 간주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영훈 스스로 ‘반일 종족주의’ 개념이 서구 민족주의와 대비했을 때 한국 민족주의의 ‘결격 사유’를 드러내기 위해 조어진 것으로 설명한 바 있고, 『투쟁』은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판에 답하는 한편 “이전 책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영훈 외 2020, 6). 물론 어떤 텍스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도 이면에, 좀 더 심층적인 ‘동기’ 곧 기존의 비판자들이 지적했던 저자들의 외세의존적인 인식과 정체성 및 정치적 목적 등도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담론의 헤게모니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오인과 알리바이가 텍스트를 넘어선 사회적·정치적 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민족주의적 비판은 발화된 담론에서 표명된 의도를 심층적인 동기와 동일시함으로써, 담론이 어떻게 발화자의 의도와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족’이 상이한 이해의 결합과 각축의 초점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대체로 간과해왔다.

을, 다른 한편으로 『반일 종족주의』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우파 민족주의에 대한 주장이 『투쟁』을 근거로 텍스트 행간 혹은 이면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²⁰⁾

또한 이 착각은 기존의 보수 민족 담론과 관련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를 접한 보수 지지층은 기존 보수 민족 담론에 대한 자신들의 오인에 기초해서 이 책을 해석하고, 저자들의 주장에 대해 재오인 혹은 반발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재오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투쟁』은 우파 민족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마치 기존 보수 민족 담론과 유사하고 연속적이라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투쟁』의 우파 민족주의 주장이 기존 보수 민족 담론의 선을 넘어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이 ‘친일 내셔널리즘’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때, 곧 텍스트에 쓰인 내용을 부정하는 독해에서만 가능하고, 이 점에서 이런 독해는 헤게모니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오인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베스트셀러로 팔린 『반일 종족주의』의 대중적 파급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중들, 그중에서도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보수층”에 의존하고 있다는 박수현의 언급 역시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이다(박수현 2019, 56). 하지만 이영훈과 이선민의 논쟁은, 『반일 종족주의』의 독자를 극우 보수층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설명할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한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첫 비판문을 시작하면서, 이선민은 “문제인 정부가 몰아치는 관제(官製) 민족주의”가 “한국 사회와 국가를 쇠퇴의 길로 밀어 넣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인식에 있어서 『반일 종족주의』에 공감하는 한편, “우파 내의 지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파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힌다. 그는 기존 보수의 민족 담론에 기반해 『반

20) 위 도식에서 점선의 사각형으로 표시된 『반일 종족주의』의 ‘우파 민족주의’와 『투쟁』의 ‘반일 종족주의’는 이런 텍스트 내의 균열 및 이로 인한 상상과 착각을 의미한다.

일 종족주의』를 읽으면서, 한국 민족주의 자체를 종족주의로 비하·부정하는 『반일 종족주의』가 좌파 민족주의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이해하고, 자칫 이 점이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의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서술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언급한다. 예컨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동화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정치면에서 보면 조선인의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조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화주의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구호에 불과했습니다”(이영훈 외 2019, 56-57)라는 구절에 대해, “일제시기 우리 조상의 대부분은 설사 경제적 풍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다 더 강조해야” 했다고 조언한다. 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나 이승만TV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일본 식민지 지배의 수탈성을 부정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탈의 체제적 원리와 구조적 양상을 총체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오해를 풀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선민이 보기에는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19세기 후반 이래 “‘자주적 근대화’를 추구했던 민간 근대문명 세력”, 곧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영훈은 이선민 식의 “진영 구분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민족주의를 ‘좌파’와 ‘우파’ 또는 ‘민중적’과 ‘시민적’으로 구분함이 타당한지 회의적”이고, 민족주의를 표방하면 “지식인으로서의 건전한 이성”은 마비되거나 왜곡되기 십상”이라고 반박했다. 반일 종족주의가 “좌·우파를 막론하고 한국인 모두를 운명처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이영훈 19/09/23). 논쟁을 시작할 무렵 『반일 종족주의』의 행간과 주변적인 수사에서 자신의 입장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을 읽어내고, 또 빠진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선민은 논쟁을 거듭하면서

『반일 종족주의』와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해갔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영훈은 『투쟁』에서 이선민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우파 민족주의’라는 수사만을 받아들였다.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이 논쟁은 『반일 종족주의』의 독자들이 기존의 보수 담론에 기대어 텍스트에 쓰여 있지 않거니와 심지어 부정된 내용을 ‘상상’하고 ‘오인’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반일 종족주의』가 보수층 너머까지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헤게모니적 효과를 발휘하기는커녕 기존 보수 지지층도 설득의 범위에 포괄해낼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보수 지지층의 반발은 보수의 민족 담론이 발휘했던 기왕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반일 종족주의』의 상업적 성공은, 사회 전체에 대한 헤게모니 효과는 애초에 방기했다 하더라도, 보수 내에서도 고립·위축될 가능성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렸고, 너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에 따라 그들이 당초 지목했던 ‘반일 종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층의 반발도 불렀던 것이다.

이는 『투쟁』에서의 변화를 상업적 성공과 그에 동반된 위기에 따른 수정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투쟁』은 이 담론의 자기부정적인 모순을 여실히 노출시키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하나의 외피를 덮어 쓰고 있지만, 민족의 긍정적인 계보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투쟁』은 『반일 종족주의』의 총체적인 한국 민족주의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정이 기존의 보수 담론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것도 아니다. 『투쟁』의 우파 민족주의는, 이선민이 반발한 것처럼, 기존 보수 담론이 민족 수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은폐·우회·부정했던 식민지의 친일을 긍정적인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으로 공공연히 재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이 함께 발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민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텍스트에서 우파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을 착각하고, 우파 민족주의를 긍정하는 텍스트에서 민족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님을 상상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

다. 두 텍스트의 민족 수사가 상충하는 이상 알리바이와 오인의 가능성은 오로지 이런 착각과 상상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놓고서 다시 그것의 부정을 상상하도록 하는 담론은 과연 어떤 유형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일 수 있으며, 그런 부정을 담론이 요구하는 바대로 오인하는 과정은 어떤 집단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과연 헤게모니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오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극우는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여러 비판자들은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보수의 ‘무이념성’에 대한 오래된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논리, 언어, 수사의 차원에서 헤게모니적 담론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부정을 통해 보수 내부의 균열을 초래하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오인’이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해되기를 강변하는 이 담론은, 분명 보수라기보다 극우의 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여러 비판자들은, 『반일 종족주의』가 대중적인 지지의 결집을 노리고, 뉴라이트의 외세의존적인 역사인식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부정론을 반복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자들은 이미 2005년에 뉴라이트가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맞서 일본 우익과의 공조 하에 반일민족주의를 공격하기로 판단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면서 쌓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내놓았다고 언급한다. 이런 관점은 뉴라이트에서부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의 금기를 파괴하는 이들의 연속성과 동질성, 반민족적 동기를 부각시킨다. 이들의 외세의존적인 인식과 정치적 의도 및 담론의 내용 모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보수의 민족 담론에서 발화자들의 의도가 반민족적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사 청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그들의 실제 정치적 궤적과 『반일 종족주의』가 모두 역사를 보수의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으로 재가공하려는 일관된 시도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은 그들 논변의 심층적인 동기에 대한 폭로·반박·부정 못지않게 그 정치적 의미 및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비판을 위해 필수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면밀히 고찰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발화자의 의도와 수용자의 인식 사이에서 담론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강조하는 이 글의 접근은 보수 담론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담론 구조와 극우 담론에서 나타난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일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것처럼 극단적인 논변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정말 그들은 극단적인 논변이 요구하는 대로 오인하는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게 한다.

이 글의 분석은 그간 지적되지 않았던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의 ‘민족’ 수사의 차이를 밝히는 한편, 기존의 보수 담론과 『반일 종족주의』·『투쟁』이 알리바이와 오인을 중심으로 한 민족 수사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연속성을 가진 하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의 자기 모순적인 극단적 담론은 기본적으로 국민 다수를 설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반일 종족주의』는 보수의 내부 균열, 혹은 보수와 극우의 균열 징후이다.

또한 이 글의 분석은 ‘민족’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 역사에 대한 인식이 경합을 벌이는 초점이며, ‘민족’의 의미는 그 경합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소위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차이에 따른 민족에 대한 상반된 입장만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내에서도 민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보수 진영의 발화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민족을 전유하기 위한 담론을 펼치지만, 그 전략은 헤게모니 효과를 위한 공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굴절되고 오인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오인의 과정은

발화자의 애초 의도와 다른 민족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들’을 낳으면서 다시 보수 진영의 담론에 영향을 미친다.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반발은 10여 년 이상 펼쳐진 보수적 민족 담론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은 『반일 종족주의』와 『투쟁』의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정치사회적인 맥락과 발화자들의 동기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특히 보수 민족 담론으로부터 극우 민족 담론으로의 변화는 보수의 실패, 곧 사상적 쇄신의 실패, 지배적 위상의 상실, 지지층의 격감이라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측면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강성현. 2020.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서울: 푸른역사. 고명섭. 2005. 『지식의 발견』. 파주: 그린비.
- 근현대사기념관. 2019. 『한일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 김미영. 2005. 김미영 기자. “자유시민연대 ‘한승조 제명 안한다.’” 『한겨레』 (3월 7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5933.html).
- 김민철. 2019. “진부한 레퍼토리, 그러나 악의에 찬 거짓 선동들: 강제동원·강제노동 부정론 비판.” 『반일 종족주의 긴급진단』.
- 김종성. 2020. 『반일 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하영. 2005. “지만원, ‘김구는 빈 라덴. 얻은 게 뭐냐.’” 『프레시안』 (3월 10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6005#0DKU>).
- 남기정. 2020. “정치 기획으로서 『반일 종족주의』: 유명 잡기에 도전함.” 『동아문화』 57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동아일보. 2005. “[사설] ‘한승조 史觀’ 받아들일 수 없다.” (3월 7일) A31면.
- 마르크스, 카알·엔겔스, 프리드리히. 김대웅 역. 2015. 『독일 이데올로기』. 두레.
- 민족문제연구소·일본군·위안부 연구회. 2019. 『『반일 종족주의』 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자료집. 민족문제연구소·일본군·위안부 연구회.
- 박수현. 2019. “날조와 무지의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반일 종족주의 긴급진단』 자료집.
- 박한용. 2020. “뉴라이트의 기괴한 역사인식.”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푸른역사.
- 박효중. 2005a. “‘편협한 민족주의’에 근거한 독립운동을 비판한다.” 『철학과 현실』 67호. 철학문화연구소.
- 박효중. 2005b. “친일파 명단—말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국논단』 192집. 한국논단.
- 부르디외, 피에르 저. 김현경 역. 2020.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 서울신문. 2020. “‘반일 종족주의’ 제대로 읽기/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1월

28일) 33면.

오마이뉴스. 2005.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정론> 기고문 전문.” (3월 4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0844&CMPT_CD=SEARCH)

호사카 유지. 2020. 『신친일파』. 파주: 봄이아트북스.

윤해동. 2012. “뉴라이트 운동과 역사인식: 비역사적 역사.” 『민족문화논총』 51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선민. 2019. “‘국사학도’ 기자가 이영훈 교수에게 묻다.” 『주간조선』 (8월 26일)
2572호.

이수기. 2005. “자유시민연대 비대위 ‘한교수 나가.’” 『중앙일보』 (3월 6일) <https://news.joins.com/article/456620>.

이승만TV. 2018. “반일 종족주의 타파 시리즈를 시작하며.”(12월 11일). (https://www.youtube.com/watch?v=GwXj74aj1cY&list=PLZZEZygYteL4j4_DxNqAAiz10XOeZoUvS&index=88)

이승만TV. 2019. “종강: 시청과 댓글에 감사드리며.”(3월 15일). (https://www.youtube.com/watch?v=MIFkeOC8HRw&list=PLZZEZygYteL4j4_DxNqAAiz10XOeZoUvS&index=59)

이승만TV. 2019. “『반일 종족주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8월 16일). (https://www.youtube.com/watch?v=snNpj_7IDuM)

이승만TV. <https://www.youtube.com/c/이승만TV>. (검색일: 2021.7.8.)

이영훈 외. 2019. 『반일 종족주의』. 서울: 미래사.

이영훈 외. 2020.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서울: 미래사.

이영훈. 2019.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의 ‘독도’ 반격.” 『주간조선』 (9월 23일)
2575호.

이지윤. 2018. “친일 청산의 딜레마: 동원된 협력자 학병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진희·박상준. 2019. “‘반일 종족주의’ 위험한 흥행 … 대중 파고드는 식민사관.”
『한국일보』 (8월 26일) 1면.

- 이철우 외. 2020.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푸른역사.
- 전강수. 2019. “‘친일파’ 비판이 억울? 자업자득이다.” 『오마이뉴스』 (8월 14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825&CMPT_CD=SEARCH)
- 전강수. 2020.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서울: 한겨레출판.
- 전재호. 2020. “민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푸른역사.
- 정혜경 외. 2019. 『반대를 論하다: ‘반일 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 서울: 선인.
- 조갑제. 2005. “親日보다 더 나쁜 건 親北.”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805&C_CC=AZ).
- 조호진. 2005. “UDU동지회, ‘일본 총라일본대사’ 화형식 등 일본 규탄.” 『오마이뉴스』 (4월 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6414).
- 하중문. 2007. “반일민족주의와 뉴라이트.” 『역사비평』 78집. 고양: 역사비평사.
- 허남설. 2019. “책 ‘반일 종족주의’ 평가로 한국당 ‘갑론을박’.” 『경향신문』 (8월 14일) A8면 1단.
- 허시먼, 엘버트 O 저. 이근영 역. 2011.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홍윤기. 2005. “자생적 친일멘털리티와 세계화 시대의 친일?” 『오마이뉴스』 (3월 1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60096>).
- 황태연 외. 2019. 『일제종족주의』. 서울: 넥센미디어. JTBC 뉴스. 2019. “‘위안부 논란’ 입 연 이영훈 ‘상처 된다고 생각 안 해.’” (8월 19일)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4945).
- YTN. 2020. “[노영희의출발새아침] “혐한일뽕’으로 20대 끌어들이는 유튜브 정치 세상.” (1월 17일)(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71134494798).

투고일: 2021.10.24. 심사일: 2021.11.16. 게재확정일: 2021.11.16.

Politics of Rhetoric of ‘Nation’ in Korean Conservative Discourse : Focusing on Anti-Japanese Tribalism(2019) and Struggle against Anti-Japanese Tribalism(2020)

Lee, Jiyun | Institute of Glocal Culture and Society, Sogang University

Anti-Japanese Tribalism(2019) and Struggle against Anti-Japanese Tribalism(2020) were criticized by nationalists for completely denying Korean nationalism as tribalism. They mainly criticized the pro-Japanese identity and political intentions of the authors of these books, and identified them with the New Right. Their criticis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nationalist rhetoric of South Korea's conservatism is a lie to cover up the guilty of the past and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However, languages, rhetorics, and logics of those two books have not been fully analyzed. In this point, this paper analyzes the rhetorics of nation in the texts. Through this, the rhetorical differences of two books are clearly delineated. And the politics of rhetoric of ‘nation’ is analyzed by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speakers and receivers on those rhetorical dimensions.

Key Words | Anti-Japanese Tribalism, Struggle Against Anti-Japanese Tribalism, Politics of Rhetoric of ‘Nation’, Korean Conservative Discourse, New Right, Far Right